

위중증 병상 ‘아슬아슬’...확진자 증가 지속땀 장담 못해

코로나 확산...광주·전남 병상 여유는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하루 7000명대를 넘어서고 광주·전남 지역도 일일 확진자가 이를 연속 100명을 넘어서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전국적으로 8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섰고, 코로나 병상 여력에 한계에 이르러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방역 대책 강화 발표에도, 코로나 확산세는 오히려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코로나 확진자는 이를 연속

전남대·조선대병원 6병상만 남아...이를 연속 확진 100명 넘어 '비상' 방역당국 병상 확보 미흡...지역 전담병원 가동률은 52.6%로 다소 여유 보전소 "완전 과부하" 호소...중환자실 의료인력·시설 확충 서둘러야

100명을 넘어섰다.

광주의 경우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로 인한 추가 확진도 계속되면서 어제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 57명이 발생했다. 전남도 5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6일 (105명)에 이어 7일 (111명)까지 이를 연속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다.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면서 8일 새벽 0시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860명이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전남도 8일 오후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전남대병원에 2병상(전체 16병상)만 남아있는 상태고 조선대병원도 4병상(13병상)만 남아있어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5병상(10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병원들의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71.8% 수준이다. 다만, 광주·전남 지역 전담병원의 코로나 병상은 52.6%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다소 여유가 있다는 게 의료계

분석이다. 현재 881병상 중 463병상이 이용 중이지만 연일 100명 넘는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이같은 점 등으로 광주·전남지역도 코로나 확진자들의 재택 치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준으로 현재 광주에서는 65명, 전남에서는 74명이 재택 치료를 받고 있다. 병상 부족은 병상 대기자 적체로 나타나고 결국 사망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방역 당국은 꾸준히 행정명령으로 병상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확보한 병상은 목표치의 절반 정도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선 보건소 등 현장도 위기감이 팽배하다. 보건소 직원들 사이에서는 "현장은 완전 과부하 상태"라며 "확진자 폭증에 자가격리자도 엄청 늘어나면서 자치구 전 직원이 자가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각한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고민거리로 나타나고 있다. 당장, 간호인력의 경우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필수적인 배대량 간호사가 부족해져 중환자실 근무 경력이 없는 초보 간호사 투입 여부까지 해야 할 지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

결국 병상 부족 문제는 코로나가 증가세를 보일수록 더 큰 문제로 다가 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코로나19 민간전문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최진수 전남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는 "지역 공공 의료 시스템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점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 번 절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중환자실 의료 인력과 시설 확충이야말로 국가에서 해야 할 공공의료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8살 딸 목숨 앗아간 것은 누구일까

엄마도 숨져...아빠는 죽은 아내에 책임 돌려

검찰, 살인혐의로 아버지 기소 나주 모녀 사망사건 법정 공방

그날, 8살 어린 자녀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누구일까. 현장에 있던 세 명 중 두 명은 목숨을 잃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명에게 당연히 유죄 선고만 남았다고 볼 수 있을까.

나주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된 40대 아버지의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8일 지법 3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밤부터 11일 새벽 5시 30분 사이 나주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8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자신의 아내와 딸이 숨져 있다고 직접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내는 목을 맨 상태였고 딸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8살난 딸의 사인을 직시사로 추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전에도 아내와 함께 죽자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부인과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뒤 술에 약을 섞어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신고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A씨를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정황 증거와 법의학 감정 결과 등이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 사망을 전제로 한 부인의

자필 유서, 컴퓨터 속 A씨 유서, 회사에 남긴 쪽지, 차량 속 번개탄 등을 제시하며 "A씨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딸을 살해한 범인"이라며 "모든 증거가 A씨를 가르키는 상황인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죽은 부인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8살 아이 몸에서 나온 A씨의 DNA에다, PC에 남아있던 A씨의 유서 등을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아이의 손톱 밑과 목 뒤 등에서 A씨의 DNA만 검출됐고 A씨의 유서에도 아이와 아내에 대해 미안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점 등으로 A씨가 아내와 공모해 아이를 죽일 생각을 가졌고 실행에 옮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A씨측은 "딸과 배우자를 잃은 가장 큰 피해자"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도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들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이에게 아이 아버지의 DNA가 발견된 것은 당연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메모를 남긴 적이 있고 A씨 스스로 유서에 대해 먼저 밝혔다는 점 등을 반박 증거로 내밀었다. 또 사건 발생 전 생활비를 부인 계좌로 송금한 점, 제주도 여행길에서 친척들 선물을 구입한 점 등은 죽기 전 주변 생활을 정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증거로 내놓았다.

A씨는 이날 최종 진술에서 미리 써온 편지를 읽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생명보다 소중한 내 딸"이라며 "아내는 딸과 작별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 "(살해)했다면 처음부터 했다고 진술했을 것, 아내와 전혀 (자녀 살해 등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일회용품 줄여요" 광주시가 정한 탄소 중립 주간(6일부터 10일까지)을 맞아 8일 오후 광주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과 기후환경과 환경관리팀 직원들이 구청 앞 광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2 홍정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청

전국특성화고노조 기자회견

현장실습 중 숨진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고(故) 홍정운(18)군 사고 <광주일보 10월 11일 6면>와 관련,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 학생, 졸업생 등 3000여명이 서명한 '제 2의 고 홍정운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청안을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특성화고노조는 "제주 실습생 이만호님 사고 이후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면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보여주기식 제도개선이 아닌 근

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생 노동법 전면적용 및 노동권 적극 보장 ▲산업안전 고위험 직종·5인 미만 사업장 현장실습 전면금지 ▲현장실습 참여기업 선정 및 관리감독 대책 강화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기업체 관리 감독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현장실습생 안전지킴이 플랫폼 제작 및 필수가입 및 운영 ▲학교 노동교육 제도화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최서현 특성화고노조 위원장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해서 안전한 현장실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금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내년 1월로 연기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7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광주지법 민사 2부는 8일 오후 예정됐던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 730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8개 재판의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2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노·사 간 합의를 위한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노·사는 특별협의를 구성, 직접 고용(정규직화) 인원과 방·시기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8개 재판의 소송 규모는 374억 원 수준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